

‘지역의사제’ 도입 통해 의료취약지 불균형 해소

당정대, 연내 법안 통과 목표...17일 국회서 공청회
비대면 진료 제도화·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도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 도입 등 필수 공공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전남을 비롯한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 결핍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정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역별, 진료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

키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특별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 복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장치가 시행된다. 의사의 수도권 쏠림에 대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중·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연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담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고, 국립대병원 관리체계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

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이 최근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는 지역의사제에 찬성했다. 반대는 13.2%, 모르겠다는 9.8%에 그쳤다.

아울러 67.2%가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했고, 68.5%가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사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조건부로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의무복무를 완

료하기 전에는 이의 지역에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무복무 불이행 시 지정명령, 면허정지 처분 이후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복지위 법안소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의무복무 위반에 대한 조치는 위헌이라며 실효성 부족, 재원 투입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는 출범 초기 ‘전문가와 의소통’을 약속했음에도 실제 추진 과정은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인다. 전문가 의견은 무시됐다”며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 제2의 의사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밖에 도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 명차방·대체조제 활성화, 한의사 엑스레이 활용 등에 대한 이전 대응 차원에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해 조만간 정기대회를 열 예정

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경기 광주시 군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지역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원이 민주당 도당위원장, 첫 운영위 개최

각급 위원장·당직자 임명 완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원)은 10일 김원이 위원장 취임 이후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차 임시당원대회 결과 및 당무계획을 보고한 데 이어, 각급 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원이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양순봉 여성위원장, 이동현 노인위원장, 이형도 청년위원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운영위에서는 여성·청년·노인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위원장 인선이 확정됐다. 주요 임명자는 대학생위원장 권범석(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장애인위원장 김홍봉(목포지역위 장애인위원장), 노동

위원장 주종섭(도의원), 을지로위원장 나광국(도의원), 사회경제제위원장 유기준(도의원), 소상공인위원장 송형곤(도의원), 자치분권위원장 이현창(도의원), 다문화위원장 김재철(도의원), 교육연수위원장 윤명희(도의원), 홍보소통위원장 임형석(도의원) 등이다. 또한 기초의원내대표협의회장에는 정재훈(목포시의회 원내대표)이 임명됐다.

사무처 당직 인선도 마무리됐다. 김원이 위원장과 함께 도당을 이끌 실무진으로는 홍보소통국장 박광배(전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대외협력국장 정대철(전 전남친환경농업협회 사무처장), 정부실장 양기호(김원이 국회 의원 보좌관)가 임명됐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여수발전연구소 개소...“시민과 여수 미래 설계”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명창환 소장(사진)이 최근 여수시 망마로 39(5층)에서 ‘명창환 여수발전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시민과 지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여수의 새로운 정책 플랫폼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명창환 소장은 “여수의 미래 비전과 정책, 현안 문제의 해법을 연구하고 생활 속 불편을 함께 고민하는 열린 연구소로 운영하겠다”며 “기존의 정치 문법을 벗어나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중심에 두고, 국가와 전남도의 정책과 자원을 여수와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통과 협치, 실용과 실현가능성이 연구소 운영의 기준이 될 것이다”며 “힘든 길이지만 시민과 함께 즐겁고 유쾌하게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앞으로 지역 현안 발굴, 미래산업·도시 발전계획 연구,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 정책 연구를 이어가며 여수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gwangnam.co.kr

문인 복구청장 “지금이 광주·전남 통합의 적기”

경제·산업·행정 통합 강조...AI 등 첨단산업 창출도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문인 복구청장(사진)이 10일 “광주·전남 시·도 통합의 성패는 절박함과 속도에 달려 있다”며 “지금이 바로 통합의 적기”라고 밝혔다.

문 청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추진 중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산업·행정 통합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통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청장은 “현재 광주는 먹거리, 일자리가 고갈되고 인구 감소를 맞닥뜨리고 있다”며 “광주도 이제 철저히 잘사니즘, 먹사니즘을 천명하고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만들어 경제적



필요로움을 통해 ‘빛의 혁명의 어머니’라는 자부심을 더욱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출구를 찾아야 하고, 각자도생의 경계로 기회를 날린다면 미래는 없다”며 “지금이 바로 통합을 이룰 때고, 광주·전남의 먹거리를 AI 등 첨단산업으로 창출하고, 광주의 인재와 기술력, 전남의 산업부지와 에너지를 결합해 새로

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사례를 분석해 시행착오를 줄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치적 결단과 함께 광주 시민과 전문가,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주민투표 등 공론화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문 청장은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고, 잘사는 광주의 교두보가 되는 시·도 통합이 이뤄진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공직 40여 년 부족한 저를 키워주신 광주에 보답하고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시·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신설 참미르초교, 학생 통학로 없어”

김나운 시의원, 등하교 안전 우려 지적

광주시교육청에서 신설 학교로 추진 중인 참미르 초등학교가 통학로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운 광주시의원(사진)은 10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교를 앞둔 상황에 통학로 미확보 문제는 학생 통학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부터 공동주택 건설 측은 통학로 개설 문제로 시유지 무상사용 협조 요청을 했지만 시에서는 난색을 표한 상태다”며 “교육청은 공유재산법상 통학로 개설 문제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개교를 목전에 두고도 통학로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학교 신설은 통학로 확보도 포함된 것이다”며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해당 시유지는 공유재산법상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사유로 보행 데크를 설치할 수 없고, 시립묘지 목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용 불허 입장이다. 정승기 기자 sky@



“최대 81분 지연...외국인 안전 위협”

채은지 시의원, 재난방송 기능 작동 안돼

글로벌광주방송(GGN·옛 광주영어방송)이 재난방송 송출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재난방송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사진)은 10일 GGN 행정사무감사에서 “GGN은 재난정보를 통보받은 즉시 송출해야 하지만, 최대 81분이 지연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GGN의 녹장 대응으로 시민과 외국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9월 기준 GGN에서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재난방송 건수는 총 277건으로 이 가운데 재난정보 수신부터 송출까지 30분 이상 29건, 60분 이상은 8건으로 나타났다.

채은지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정보가 늦게 전달돼 피해가 가중됐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지역 주민과 외국인 이 즉시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열악”

차영수 도의원 “도·농 격차 줄여야”

전남도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차영수(더불어민주당, 강진) 의원은 최근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전남의 농어촌 여건을 고려한 기준치(차등) 예산을 반영해 도시·농촌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최근 6개월 평균 ‘현원’이 정원 구분에 미달하면, 낮은 구간 단위로 적용하고 운영비도 정원 구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있다”며 “인건비 또한 정원 구간별 법정 종사자 수와 월 기준액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구조로, 소규모·농어촌 센터가 많은 전남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실적 저조”

이광일 도의원, 수요조사 단계 미흡 질타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사진)은 최근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추진 사업인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추진 실적률이 20% 미만에 그친 것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조사 단계부터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전남도는 조부모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360가구를 목표로 올해 추정 예산에 6억48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신청은 70명, 최종 선정 인원은 58명에 머물렀다.

이광일 의원은 “당초 목표 대비 16%의 저조한 실적률은 사업 목표 달성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성립 전에 정확한 수요조사와 시·군·구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됐다면, 현재와 같은 저조한 실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 전남의 사업 규모가 과다하게 책정됐음을 꼬집었다.

이현구 기자 gnnews1@

